

의약분업 소노(小老)

김진우/약사공론 편집국 차장

작 금의 우리 나라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한창
 회자되는 총체적 국가위기론이 결코 생경
 — 한 것만은 아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도무지 정리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정치 불안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듯 우리 나라
 역시 결코 예외 대상이 아니다. 이중 필자의 직업상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다.

국가 보건의료 개혁의 단초인 의약분업은 그러
 나 시행된지 3개월이 다됐지만 정착까지는 아직 거
 리가 먼 듯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의사는 진료, 약사는 조제라는 단순 명료화된
 의미 규정만으로 보면 의약분업은 분명 대의적 차
 원에서라도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
 나 최근의 상황은 분업의 본질을 넘어서, 나아가 왜
 꼭이라는 굴절된 시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醫政간 지겨운 힘겨
 투기가 국민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언급했듯이 분업의 전제인 의약사간 명확한 직
 능구별에 따른 결과물인 국민건강 확보가 본의와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
 다. 그러나 한창 추진중인 다양한 개혁작업이 분업
 이란 변수에 제동이 걸린 나머지 여타 정부 정책마
 저 추진력 결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레임덕이니 힘의 누수니 하는 등등의 절
 하성 발언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마침내 대통령이 직접 분업문제 해결에 나섰다.
 의료계의 힘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쓸쓸하기는 하지
 만 신타래처럼 영긴 각종 현안의 키(key)로서 대통
 령은 분업을 선택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말 그대로 민초들은 당장에 주어진 민생의 출렁
 거림에 따라 정권을 향한 해바라기가 되거나 아니
 면 비협조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醫政 대화의 걸림돌인 의료
 계의 사과 요구를 그간 견지해온 입장을 버리고 유
 감을 표명한 것도 대통령의 의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9월26일 이같은 정부측 사과로 재개된 의정간
 첫 협상은 그러나 의료계가 다시 경찰청장 사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결렬, 난항을 예고했다.

첫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계에 경찰청장의 직접사과를 약속했다. 의료계의 유
 화적 태도에 급급한 나머지 경찰청장의 동의를 구
 하지도 않은 채 덜씩 약속해 버린 것이다.

일단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지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서투름
 은 아쉬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흔히 일부 충실치 못한 공무원을 일컫는 무소
 신, 무원칙이란 단어들 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 의료계는 담당부
 서의 상투를 잡고 마구 흔들어 대는 꼴이 됐다.

주도권 선점에 따른 의료계의 무소불위적 협상
 자세도 분명 지양되어야 하지만 보건정책 수립과 시
 행의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계속 끌려 다니는 것은
 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다.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보건복지
 부의 순진함을 답답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찢찢매게끔한 의료계의 투쟁에 감동받아야 하는지
 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한다.

분명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해결방식으로는 칩칩
 히 썩인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